

대법원 2024도5087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인이 과외 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·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김상환)는, **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부작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**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24. 6. 14. 선고 2024도5087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- 피해자 ⇒ 1996년생 여성
- 피고인 ⇒ 1999년생 여성

나. 공소사실의 요지

- 살인
 - 피고인은 2023. 5. 26.경 과외 앱을 통하여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살해함
-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
 -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, 대형 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의 수풀에 버려 이를 유기함

▣ 절도

-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,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함

2. 소송경과

▣ 제1심

- 무기징역
-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
-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
- 쌍방 항소

▣ 원심

- 무기징역
- 압수된 증거물 몰수
-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
- 피고인 상고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
- ▣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의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피고인의 연령·성행·환경, 피해자와의 관계,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·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
-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